

지역개발연구 제45권 제2호, 2013년 12월, pp.81-108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과제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일태* · 김대성** · 변장섭***

본 연구는 전남도와 기초지자체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현황 및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의 일자리 방향 및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2012년 7월 기준 244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등 일자리 대책을 위한 중요한 중앙-지방간 주요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요컨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지역내·외의 사례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남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주요 정책과제로 지자체 일자리 추진체계 구축과 지자체단체장의 정책의지 강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의 역할 확립 등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일자리 창출, 고용률, 전라남도

I. 서 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문제를 비롯한 기존 사회안전망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초래하였다.¹⁾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종전의 정부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0년 10월 21일 제43회 국무회의를 거쳐 ‘2020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합동으로 향후 10년간 약 24만개의 일자리 창출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해왔다.

*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kit2603@chonnam.ac.kr)

** 전남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dskim@jeri.re.kr)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박사수료 (e-mail : geotweety@naver.com)

1) 사구치 카즈로(2011)는 간접고용노동자 중심의 비정규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 및 실업상태를 유발시키고, 정규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조정이 이어지고 나아가 신규채용의 대폭적인 억제도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정부의 고용정책의 하나로 2010년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가 시행되었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목표 달성과 대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일자리 협력 사업이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이 일자리 질의 향상과 더불어 고용률을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기본적인 고용정책 방향을 계승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2010년부터 시행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고용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연구는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성 및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고용률 제고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길이고, 선진국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이 필히 성장을 수반하여야 하며, ‘성장 없는 고용’이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후 63-64%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현재의 경제구조 하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률 정체의 주요 원인은 노동수요 측면에서 성장잠재력 약화와 성장·고용 연계 약화, 노동공급 측면에서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와 근로능력이 충분한 장년층의 조기 은퇴, 제도·관행 측면에서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미흡,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자치단체의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사회복지, 관광, 문화, 산업단지 등의 정책 및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고용포럼과 더불어 고용관련 거버넌스 구축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일자리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아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공시제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연구는 도입 시점인 2010년 이후 주로 추진과정 분석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김진덕·남윤명(2010)은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도입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김대성(2011)은 전남 고용정책의 주요과제 등 전남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김대성(2012)은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의미와 전남지역의 고용 및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태를 진단하고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병탁(2011)은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개요를 정리하고 경북지역의 일자리공시제 추진 현황을 파악하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분석하여 경북지역에서 일자리공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모성은(2011)은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우식·박상우(2012)는 일자리공시제를 기반으로 지역고용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고용정책의 실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주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추진현황과 성과 및 과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평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주요 자료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개념과 기본방향, 주요내용 등을 파악하고,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참여현황, 주요 목표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3장에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를 파악하고, 전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관련 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의 의식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4장은 연구에 대한 요약 및 한계점으로 구성된다.

II. 전남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추진현황

1. 전남의 고용 실태

2000년대 이후 전남의 지역내총생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고용 없는 성장’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전남의 2012년 고용구조(고용노동부, 우리 지역 노동시장의 이해,

2013)를 보면, 고용률 62.6%(전국 59.4%), 취업자 수 911천명, 실업자 수 15천명, 비경제활동인구 529천명이고 15-64세 고용률은 67.5%로 전국 64.2%보다 높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33.7%로 전국 40.4%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취업과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 취업계수(Employment to GRDP Ratio)는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내총생산의 산출액 10억 원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표 1>. 그리고 고용탄력성(GRDP Elasticity of Employment)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2001년 이후 몇 해를 제외하고는 음(-)으로 고용감소 잠재성을 갖고 있다.²⁾ 그러나 2011년 들어 고용탄력성은 0.02로 다시

<표 1> 전라남도 취업계수 및 고용탄력성

연도	취업자수(천명)		지역내총생산(10억원)		취업계수 (=A/C*1000)	고용탄력성 (=B/D)
	(A)	증가율(B)	(C)	증가율(D)		
2001	978	-0.31	29,380	5.57	33.29	-0.06
2002	981	0.31	33,603	14.37	29.19	0.02
2003	958	-2.34	36,001	7.14	26.61	-0.33
2004	931	-2.82	39,706	10.29	23.45	-0.27
2005	931	0.00	42,816	7.83	21.74	0.00
2006	918	-1.40	42,182	-1.48	21.76	0.94
2007	905	-1.42	47,021	11.47	19.25	-0.12
2008	904	-0.11	52,387	11.41	17.26	-0.01
2009	909	0.55	51,048	-2.56	17.81	-0.22
2010	885	-2.64	58,750	15.09	15.06	-0.17
2011	886	0.11	62,322	6.08	14.22	0.02
2012	911	2.82	-	-	-	-

주: 1) 취업계수 = 취업자/GRDP,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GRDP 증가율.

2) 고용탄력성 등의 경우 소수점 아래가 고려되어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2012년도는 GRDP 데이터 미비로 취업계수나 고용탄력성을 구할 수가 없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내 총생산, 각 년도

2) 취업계수와 고용탄력치에 대한 해석은 일정 부분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GRDP가 일반적으로 (+)인 경우에는 달리 경제위기 등으로 GRDP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고용탄력성을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의 경우 고용탄력성이 -0.22이지만, GRDP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고용 감소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시기에는 공공기관 중심의 일자리 대책과 민간에서의 구조조정 시행 자체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시기이다.

회복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취업자 수가 2010년 885천명으로 최하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 2년간 증가하고 있어 2012년도의 고용탄력성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개념과 기본방향

2010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개념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일자리 목표와 지역고용대책을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고용노동부, 2010.3.25. 보도자료)이었고, 계획 확정단계에서는 ‘선거직인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공표·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고용노동부, 2010.7.20.)으로 정의되었다(남병탁, 2011).

이런 개념에 대해 김대성(2011)은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가 ‘지자체의 일자리 목표 및 추진대책’을 담고 있어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기본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기존에 고용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목표 및 추진대책 마련에 실효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자체의 일자리공시제는 지자체의 고용관련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세계적인 조류에 따른 정책이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 대책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³⁾에서 출발하였다(남병탁, 2011).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민선5기(‘10.7.1-’14.6.30)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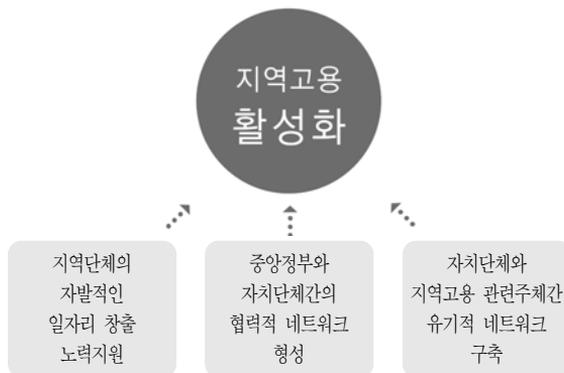
3) 지자체별 경제 및 고용 여건(지역별 입지조건, 산업기반, 고용률 및 실업률 등 경제지표, 인구구성, 인적자원현황, 지자체별 재정적 여건 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대책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하드웨어적 기능과 적은 예산규모로 인하여 지방의 적극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김진덕·남윤명, 2010)

이다(고용노동부, 2012).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대성, 2011). 첫째,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동시에 협력 사업임을 강조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원을 명시한다.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둘째, 지자체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지역내 다양한 고용주체들의 고용 및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한다. 지자체는 형식적인 일자리 창출 공약을 넘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의 다양한 고용 관련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 문제에 대처한다.

따라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기본방향은 <그림 1>과 같다(고용노동부, 2012). 첫째,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구호 수준”의 일자리 공약을 넘어서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모델을 구축하도록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을 지원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하며, 중앙정부는 컨설



자료 : 고용노동부(2012)

<그림 1>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기본방향

팅, 지역일자리 정책 한마당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한다. 셋째, 자치단체와 지역의 다양한 고용 관련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고용심의회(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포럼 등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제고시킨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공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자리 목표는 임기 중 달성코자 하는 연차별 고용률 증가 및 취업자 수 증가 목표인 공통지표와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표 2>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프레임

목 표	분 야	일자리 대책 예시
① 공통지표 - 고용률 증가 - 취업자수 증가 ② 개별지표 - 일자리대책 - 분야별목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친화적인 산업 발굴·육성, 산업단지 조성 ● 내·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창업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타 일자리 창출 대책
	취업지원 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을 통한 취업실적 확대 ●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인력부족업체 빈 일자리 해소 ● 기타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대책
	직업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근로자·실업자 등 직업훈련 지원 ●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직업훈련 ●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 ● 기타 직업훈련과 관련한 대책
	일자리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예산(전체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확보 및 적절한 집행 ● 일자리 대책 전담기구 운영, 인력 확충, 조례·규칙 제·개정 ● 취업알선망 확충 ● 기타 일자리대책 관련, 인프라 구축
	지역 유관기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대책 관련, 국가기관, 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등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 타 기관과의 일자리 협력 관련 MOU 체결 ●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협조, 공동 사업 추진 ● 기타 유관기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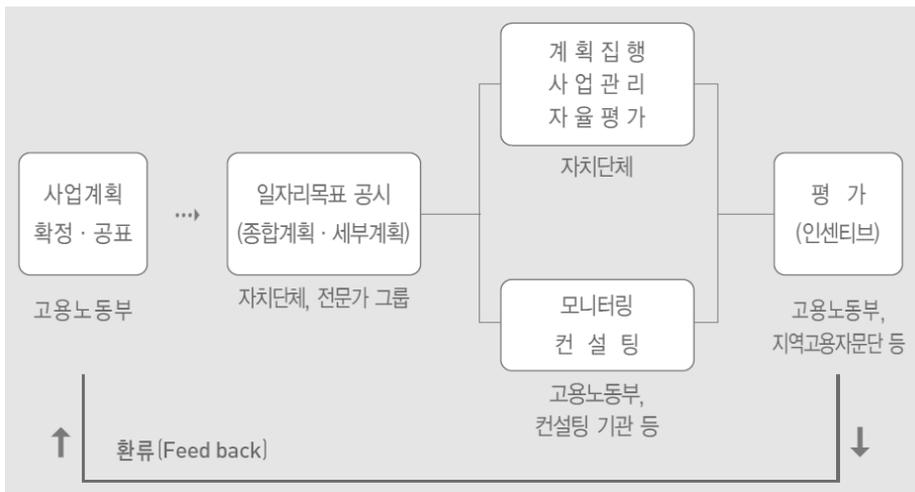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공시제 매뉴얼(2010)

맞춰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대책의 개별 사업별 목표인 개별지표로 나뉜다. 또한 일자리 대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발굴·공시하되, 투자유치·전략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치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목표 및 대책은 자치단체가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를 활용하여 수립한다. 또한 자치단체는 수립된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공시하고,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시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내 고용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공시한 내용을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의 매년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사업계획 확정 및 공표에 따라 자치단체는 일자리목표를 공시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일자리 계획 및 대책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 및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자문단은 매년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러한 추진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자료: 고용노동부(2012)

<그림 2>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추진 절차

3. 전남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추진현황

1) 전남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참여현황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도입 초기인 2010년 8월말에는 244개 지자체 중 181개(74.2%) 지자체가 참가하였지만, 이후 고용노동부의 자체 노력과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2011년 1월말 기준 참가 지자체는 209개로 늘어났고, 2011년 5월말에는 225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2012년 7월 이후 244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여 일자리대책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중앙·지방간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은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2008년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⁴⁾ 그리고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도입 초기인 2010년 7월부터 참여하고 있다.

2) 전남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목표치 분석⁵⁾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공통목표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자리대책 공시 목표치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역시·도의 총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2,674,903명이고 평균 목표치는 222,908명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의 평균 목표치가 211,538명이지만, 전라남도도는 이보다 약 9만명이 많은 309,362명으로 나타났다.⁶⁾

<표 4>에서 보듯이 기초시·군·구의 총 목표치는 3,637,189명, 평균 목표치는 24,912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시의 평균 목표치는 42,081명이지만, 전라남도도는 48,508명으로 약 6천명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군의 평균 목표치는 10,509명이지만, 전라남도도 9,948명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⁷⁾

4) 전남은 2008년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 12월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2010년 2월, 3월 '제1차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개최, 2010년 7월 지역 일자리공시제 참여, 2010년 12월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였다(김대성, 2011).

5)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목표치 분석은 기본적으로 지역고용정책협의회회의 '2011년 1/4분기 회의자료(2011.3)'를 참조하였다. 단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내 기초시·군의 목표치는 각 지자체별 세부계획을 참조하였다. 자치단체에서 공시한 목표치 현황파악을 위해 행정구역단위(광역·기초)별, 지원부문별, 고용형태별, 부문별·행정구역단위별·연차별, 지역별 목표치의 합계 및 평균값을 비교·분석하여 공시 목표치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목표치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인구수·경제활동인구·취업자수와 비교·분석하였고, 광역자치단체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목표치와 지원부문별, 고용형태별 목표치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6) 경기, 전북 전남은 일자리대책을 공시를 하였으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기초자치단체 합으로 계산하였다. 전남은 총 목표치는 실국별 일자리창출 목표를 합산하여 계산하였지만, 부문별 세부 목표는 제시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합으로 계산하였다.

<표 3> 행정구역단위별 목표치 비교 (광역자치단체)

(단위 : 명)

구분	광역·기초 계	광역자치단체			
		계	시	도	전라남도(합계)
계	6,312,092	2,674,903	1,405,673	1,269,230	309,362
평균	-	222,908	234,278	211,538	

<표 4> 행정구역단위별 목표치 비교 (기초자치단체)

(단위 : 명)

구분	기초자치단체					
	계	시	전라남도 시 계	군	전라남도 군 계	구
계	3,637,189	1,977,847	242,541	514,955	155,864	1,144,387
평균	24,912	42,081	48,508	10,509	9,948	22,887

지원부문별 목표치를 비교해보면,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공공부문의 목표치가 민간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와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민간부문 평균 목표치는 151,776명, 59,339명이고 기초자치단체는 15,435명, 10,589명으로 나타났다.⁸⁾

전체 목표치 중 민간부문의 비중은 광역자치단체 28.1%(광역시 28.6%, 광역도 27.6%), 기초자치단체 38.3%(기초시 47.5%, 기초군 33.2%, 기초구 23.6%)로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이 높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기초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민간부문의 비중이 35.4%로 광역도 평균인 27.6%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전라남도의 기초시·군의 경우 각각 37.1%, 32.6%로 전국의 기초시·군의 평균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7) 전라남도의 경우 22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일자리대책을 공시를 하였으나, 곡성군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하였다.

8) <표 5>의 목표치와 <표 3>의 목표치와의 차이점은 <표 5>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지원한 일자리로 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체 일자리(<표 3>)와는 범위가 다르다.

<표 5> 지원부문별 목표치 비교 (광역자치단체)

(단위 : 명)

구분		광역·기초 계	광역자치단체				
			계	시	도	전라남도 (합계)	
지원 부문	공공 부문	계	3,158,960	1,214,210	543,362	670,848	246,947
		평균	-	151,776	135,840	167,712	
	민간 부문	계	1,681,959	474,717	218,642	256,075	135,335
		평균	-	59,339	54,660	64,018	

<표 6> 지원부문별 목표치 비교 (기초자치단체)

(단위 : 명)

구분		계	기초자치단체				구	
			시	전라남도 시 계	군	전라남도 군 계		
지 원 부 문	공공 부문	계	1,944,750	917,634	150,385	309,224	96,562	717,892
		평균	15,435	24,148	30,077	7,191	7,428	15,953
	민간 부문	계	1,207,242	831,172	88,562	154,213	46,773	221,857
		평균	10,589	21,872	17,712	4,167	3,598	5,688

고용형태에 따른 목표치를 비교하면, <표 7>과 <표 8>에서 보듯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의 목표치가 높게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상용·임시직 평균 목표치는 각각 83,179명, 134,544명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7,626명, 15,286명이다.

전체 목표치 중 상용직의 비중은 광역자치단체 38.2%(광역시 36.6%, 광역도 38.9%), 기초자치단체 33.5%(기초시 42.1%, 기초군 35.4%, 기초구 18.7%)로 임시직의 비율이 높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기초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상용직의 비중이 42.8%로 광역도 평균치인 38.9%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라남도의 기초시·군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각각 48.3%, 33.2%로 기초시는 전국 평균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 기초군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7> 고용형태별 목표치 비교 (광역자치단체)

(단위 : 명)

구분		광역·기초 계	광역자치단체				
			계	시	도	전라남도 (합계)	
지원 부문	상용	계	1,094,611	415,896	127,175	288,721	163,527
		평균	-	83,179	63,587	96,240	
	임시	계	2,017,900	672,722	219,881	452,841	218,541
		평균	-	134,544	109,940	150,947	

<표 8> 고용형태별 목표치 비교 (기초자치단체)

(단위 : 명)

구분		계	기초자치단체				구	
			시	전라남도 시 계	군	전라남도 군 계		
지 원 부 문	상 용	계	678,715	435,759	117,165	121,639	46,362	121,317
		평균	7,626	15,026	23,433	4,054	3,566	4,043
	임 시	계	1,345,178	597,826	125,376	221,337	93,165	526,015
		평균	15,286	21,350	25,075	7,377	7,167	17,533

‘일자리창출’ 부문 연차별 목표치를 살펴보면, <표 9>에서 보듯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2013년의 목표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시를 제외하면 2014년 목표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가 광역도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많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 구, 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광역도 평균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 가장 높은 목표치가 나타났다.

연평균증가율은 광역자치단체 9.5%와 기초자치단체 11.8%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의 연평균증가율이 다소 높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 9.8%로 광역도 9.6%보다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시 14.5%와 기초군 10.9%, 기초구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연평균 3.6% 감소하였다. 전라남도의 기초시·군은 각각 0.2%, 12.1%로 나타나 기초군은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기초시는 매우 낮은 증가율이 나타났다.

<표 9> '일자리창출' 목표치 행정구역단위·연차별 비교

(단위 : 명)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광역	계	계	2,674,903	402,996	535,576	595,006	581,730	559,595
		평균	222,909	36,636	44,631	49,584	48,478	46,633
	시	계	1,405,673	214,884	265,909	320,563	300,651	303,666
		평균	234,279	53,721	44,318	53,427	50,108	50,611
	도	계	1,269,230	188,112	269,667	274,443	281,079	255,919
		평균	211,538	37,622	44,944	45,740	46,846	42,654
전남	계	309,362	62,571	63,714	64,944	65,050	53,083	
기초	계	계	3,594,552	533,564	701,339	746,145	796,443	817,061
		평균	24,962	4,012	4,870	5,182	5,531	5,674
	시	계	1,945,847	267,456	378,551	413,430	443,587	442,823
		평균	42,301	6,523	8,229	8,987	9,643	9,626
	전남시	계	242,541	44,835	53,422	51,662	48,396	44,226
		평균	48,508	8,967	10,684	10,332	9,679	8,845
	군	계	504,318	76,646	93,385	105,843	113,418	115,026
		평균	10,506	1,782	1,945	2,205	2,362	2,396
	전남군	계	155,864	23,120	28,995	32,025	35,685	36,039
		평균	9,948	1,651	1,812	2,001	2,230	2,252
	구	계	1,144,387	189,462	229,403	226,872	239,438	259,212
		평균	22,888	3,866	4,588	4,537	4,788	5,184

주목할 만한 것은 전라남도의 기초시에서 광양시와 여수시가 2012년에 가장 높은 일자리창출 목표치를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2014년으로 갈수록 목표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시 전체의 일자리창출이 목표치가 2012년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차별 증가율은 2011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32.9%와 기초자치단체 31.4%로 가장 높았으며, 2012년은 광역자치단체 11.1%와 기초자치단체 6.4%, 2013년은 광역자치단체 -2.2%와 기초자치단체 6.7%, 2014년은 광역자치단체 -3.8%와 기초자치단체 2.6%로 나타났다.

2011년은 광역시 23.7%, 광역도 43.4%, 기초시 41.5%, 기초군 21.8%, 기초구 21.1%로 다른 년도보다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2012년은 광역시

20.6%와 기초군 13.3%로 다소 높게 설정하였다.

전라남도는 2011년과 2012년, 2013년까지는 목표치가 각각 1.8%, 1.9%, 0.2%로 증가하였지만, 2014년에는 -18.4%가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의 기초시는 2011년에는 19.2%의 증가를 보였지만,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각각 -3.3%, -6.3%, -8.6%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기초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 2013년, 2014년에 각각 25.4%, 10.5%, 11.4%,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부문은 <표 10>에서 보듯이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매년 꾸준히 목표치가 증가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목표치가 다소 감소하였다. 광역시의 평균 목표치가 광역도보다 높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부문의 목표치가 시·구·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⁹⁾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도 평균치에 31.5%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전라남도의 기초군의 목표치도 전국 기초군 평균치의 42.3%에 해당하였고, 특히 전라남도의 기초시는 전국 기초시 평균치에 8.6%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연평균증가율은 광역자치단체 11.0%와 기초자치단체 14.7%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의 연평균증가율이 높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 16.1%로 광역도 5.7%보다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시 17.5%와 기초군 11.0%, 기초구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5.6%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높은 연평균증가율이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의 기초시·군의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26.6%, 24.7%로 전국 평균치에 2배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연차별 증가율은 2011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48.5%와 기초자치단체 48.3%로 가장 높았으며, 2012년은 광역자치단체 2.3%와 기초자치단체 4.9%, 2013년은 광역자치단체 1.9%와 기초자치단체 3.3%, 2014년은 광역자치단체 -8.5%와 기초자치단체 2.2%로 나타났다.

2011년은 광역시 72.8%, 광역도 19.8%, 기초시 60.2%, 기초군 35.7%, 기초구 31.2%로 다른 년도보다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2014년은 광역시

9)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와 직업훈련 추진에서 2010년과 2011년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일자리공시제가 계획단계로서 처음 도입된 시점은 2010년 7월로 지역일자리공시제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2011년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4%로 감소하였다.

전라남도의 연차별 증가율은 2011년의 경우 108.5%로 2배가 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지만, 2012년과 2014년은 각각 -6.1%, -0.4%의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기초군은 2011년에 92.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특히 기초시는 122.8%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기초군은 연차별로 매년 증가하였지만, 기초시는 2011년의 높은 증가율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 10>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목표치 행정구역단위·연차별 비교

(단위: 명)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광역	계	계	770,421	110,571	164,160	167,972	171,129	156,589
		평균	64,202	12,286	13,680	13,998	14,261	13,049
	시	계	472,214	59,824	103,352	106,576	108,508	93,954
		평균	78,702	14,956	17,225	17,762	18,084	18,084
	도	계	298,207	50,747	60,808	61,396	62,621	62,635
		평균	49,701	10,149	10,134	10,232	10,436	10,439
전남	계	15,659	1,747	3,642	3,419	3,433	3,418	
기초	계	계	719,274	98,726	146,392	153,528	158,596	162,032
		평균	5,754	931	1,171	1,228	1,268	1,306
	시	계	441,425	56,773	90,956	95,353	98,043	100,300
		평균	10,766	1,622	2,218	2,325	2,391	2,507
	전남시	계	8,312	926	2,063	1,805	1,784	1,734
		평균	927	185	413	361	357	347
	군	계	60,062	8,912	12,095	12,800	13,120	13,135
		평균	1,501	287	302	320	328	328
	전남군	계	7,347	821	1,579	1,614	1,649	1,684
		평균	635	91	132	135	137	140
	구	계	217,787	33,041	43,341	45,375	47,433	48,597
		평균	4,949	826	985	1,031	1,078	1,104

‘직업훈련 추진’ 부문 연차별 목표치는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역도의 평균 목표치는 18,012명, 광역시는 203,347명으로 광역도의 평균 목표치가 광역시의 8.9% 수준이다. 기초자치단체 목표치는 시, 군, 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직업훈련 추진’ 목표치는 155,440명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기초시는 평균 1,121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6,098명의 18.3% 수준이다. 전라남도의 기초군은 평균 12,708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2,240명의 약 6배가 높은 수준이다.¹⁰⁾ 전라남도의 경우, 기초시·군의 목표치를 합산하여 타 광역도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평균증가율은 광역자치단체 5.0%와 기초자치단체 7.2%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의 연평균증가율이 높았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 5.6%로 광역도 0.1%보다 높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시 12.2%와 기초군 3.2%, 기초구 7.1%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광역도 평균치보다 높은 1.0%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기초시·군은 각각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5.9%, 0.9%로 나타났다.

연차별 증가율은 2011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14.7%와 기초자치단체 26.8%로 가장 높았으며, 2012년은 광역자치단체 4.3%와 기초자치단체 -1.6%, 2013년은 광역자치단체 2.2%와 기초자치단체 2.1%, 2014년은 광역자치단체 1.3%와 기초자치단체 1.4%로 나타났다.

2011년은 광역시 14.7%, 광역도 6.9%, 기초시 47.6%, 기초군 12.0%, 기초구 22.0%로 다른 년도보다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2013년은 광역도 -14.5%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라남도의 연차별 증가율은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3.3%, 1.3%로 다른 년도보다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였고, 2012년과 2014년은 각각 -0.6%, -0.1%로 다소 감소하였다. 전라남도의 기초시는 2011년과 2013년에 각각 41.7%, 2.3%로 다른 연도보다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였고, 2012년과 2014년은 각각 -18.3%, -2.2%로 감소하였다. 전라남도의 기초군은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 각각 2.1%, 0.2%, 1.3%로 모두 증가하였다.

10) 전남도 기초군의 높은 목표치 평균은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경진대회와 일자리 대책 평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개 정도의 각종 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표 11> '직업훈련 추진' 목표치 행정구역단위·연차별 비교

(단위 : 명)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광역	계	계	1,124,808	196,383	223,632	232,820	234,111	237,862	
		평균	102,255	24,548	20,330	21,165	21,283	21,624	
	시	계	1,016,733	175,181	200,975	209,520	214,181	216,876	
		평균	203,347	58,393	40,195	41,904	42,836	43,375	
	도	계	108,075	21,202	22,657	23,300	19,930	20,986	
		평균	18,012	4,240	3,776	3,883	3,321	3,497	
	전남	계	155,440	30,234	31,241	31,056	31,467	31,442	
	기초	계	계	578,389	95,126	120,663	118,693	121,133	122,774
			평균	5,164	1,056	1,107	1,059	1,081	1,096
		시	계	243,959	35,848	52,908	50,012	51,791	53,400
평균			6,098	1,054	1,356	1,250	1,294	1,335	
전남시		계	5,605	947	1,342	1,097	1,122	1,097	
		평균	1,121	189	268	219	224	219	
군		계	250,954	45,566	51,028	51,216	51,601	51,543	
		평균	2,240	1,423	1,379	1,347	1,357	1,356	
전남군		계	149,835	29,287	29,899	29,959	30,345	30,345	
		평균	12,708	2,662	2,492	2,497	2,529	2,529	
구		계	83,476	13,712	16,727	17,465	17,741	17,831	
		평균	745	571	506	513	521	524	

III.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과제

1.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¹⁾ 첫째,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244개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등 일자리대책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각 자치단체가 일자리 목표를 각각 공시하게 되는데, 2012년 지역 단위의 일자리 창출은 목표에 108%를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11) 고용노동부(2013) 참조.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중앙-지방간 협력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이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접목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즉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조가 활발해짐으로써 일자리창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년 권역별로 실시되는 ‘지역 고용정책 아카데미’가 해당 권역 내·외의 사례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참여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고용노동부(2013)의 ‘2012년도 공시제 평가 총평’에 따르면, 자치단체장들의 일자리에 대한 높은 의지 표출과 좋은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발굴, 그리고 실제 일자리창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처음으로 실시된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일자리창출 관심과 의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는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 설치와 그 위상과 규모, 그리고 역할에서도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일자리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일자리 조직의 위상을 광역단체에서는 국 수준으로, 기초단체에서는 과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일자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고용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셋째,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목표 달성 구체적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¹²⁾과 연계될 수 있는데, 특히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통해 2012년도에만 총 7,200여개의 신규 일자리(276개 사업)를 창출할 수 있었다.

2.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과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민선5기 기간인 2012년 자치단체 담당자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³⁾

12)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수행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 2013).

13) 전남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 사업 중, 2012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자치단체

조사결과, 컨설턴트는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에 대한 관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컨설팅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40%, ‘매우 만족’ 20% 등 매우 높았다. 그러나 담당 자치단체부서(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50%(대체적 만족 30%, 매우 만족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그림 3>. 또한 담당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컨설팅 요구수준, 자료 및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사업추진 노력도, 자치단체장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는 업무능력, 이해도, 친절성 등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의지와 접촉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그림 4>.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기여도(‘대체로 만족’ 50%, ‘매우 만족’ 10%)와 지역고용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대체로 만족’ 20%, ‘매우 만족’ 30%) 모두 불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5>.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 업무에 대한 만족도(‘대체로 만족’ 40%, ‘매우 만족’ 20%)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그림 6>.

컨설팅 관련 애로사항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업무과다, 관심 부족 등을 제기했다. 컨설팅 개선사항으로는 인센티브 부여, 평가제도 개선, 근무연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대성, 2013>.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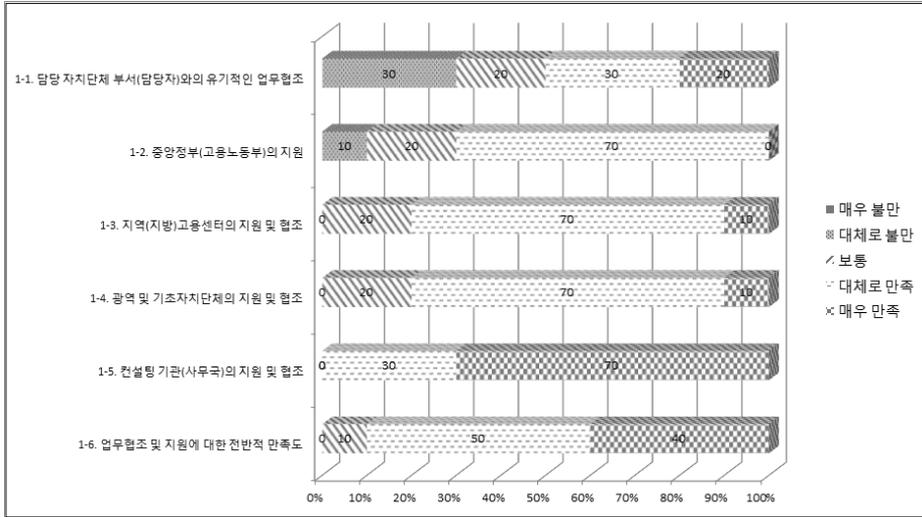
자치단체 담당자용 설문분석결과,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업무 파악 정도는 80%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7>.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는 70% 가량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8>. 특히,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에 대한 근무 경력이 많아질수록 업무 파악 정도는 높아지고,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담당자의 근무 연속성 확보를 통한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목적, 체계와 방법, 시기, 지역특성과 여건의 적합성, 현실성, 구체성 등이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컨설팅 내용과 질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지역특성과 여건에 보다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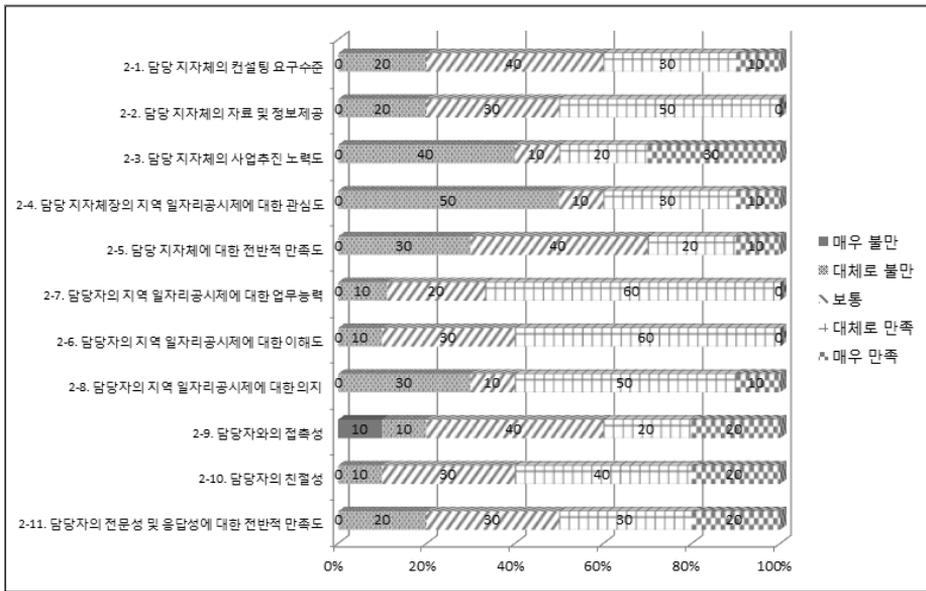
담당자와 컨설턴트에게 설문분석 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14) 본 조사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이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 사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보고서 작성, 추진성과 단계, 신규 사업 발굴, 계획수립 단계, 사업집행 단계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집행단계의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도움에 만족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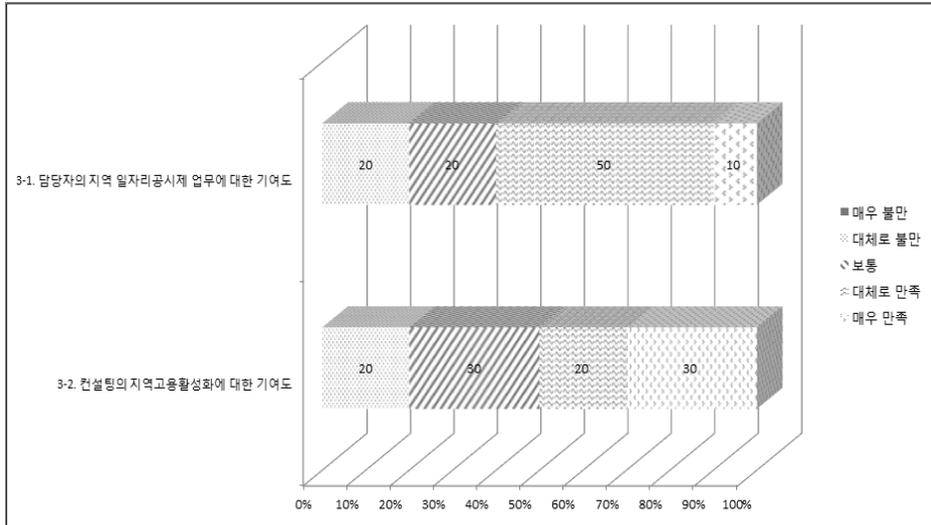


<그림 3> 컨설팅트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에 대한 자치단체,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및 컨설팅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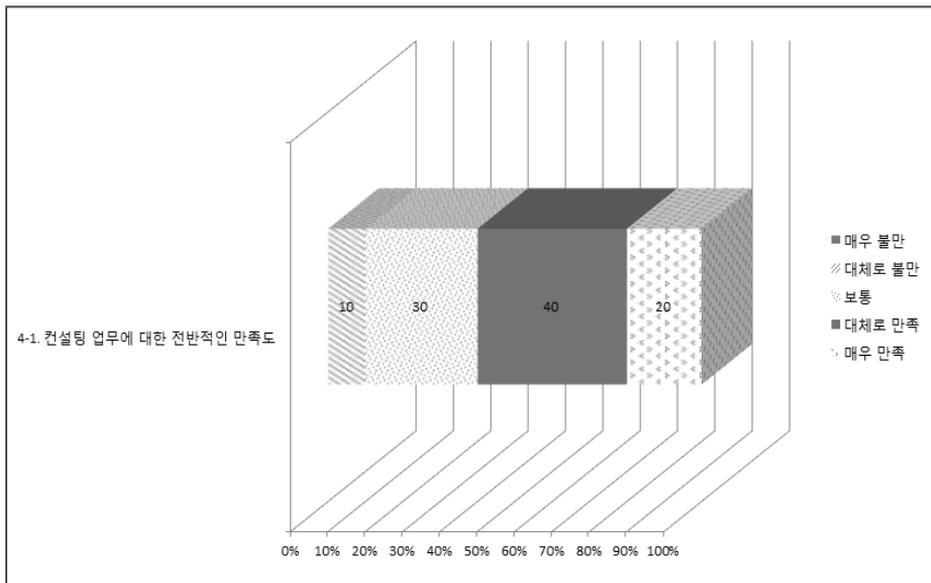


<그림 4> 컨설팅트의 담당 지자체 및 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사업집행단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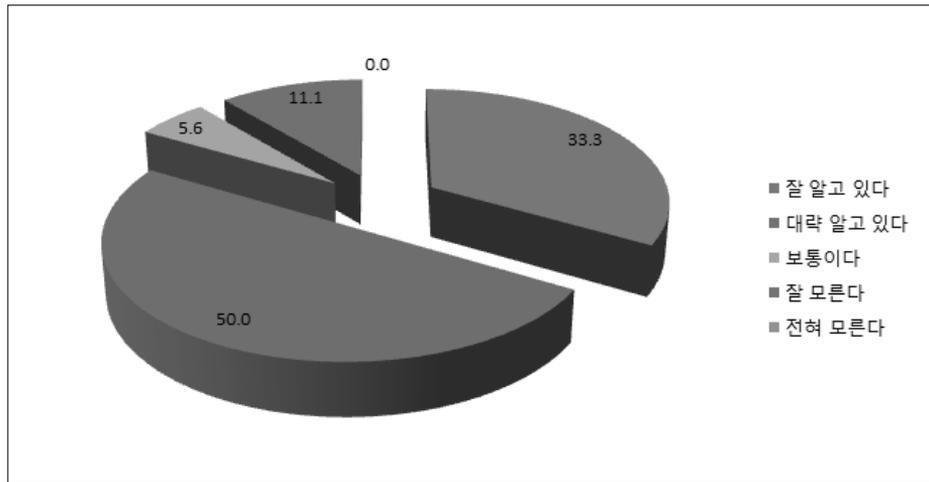


<그림 5> 컨설팅트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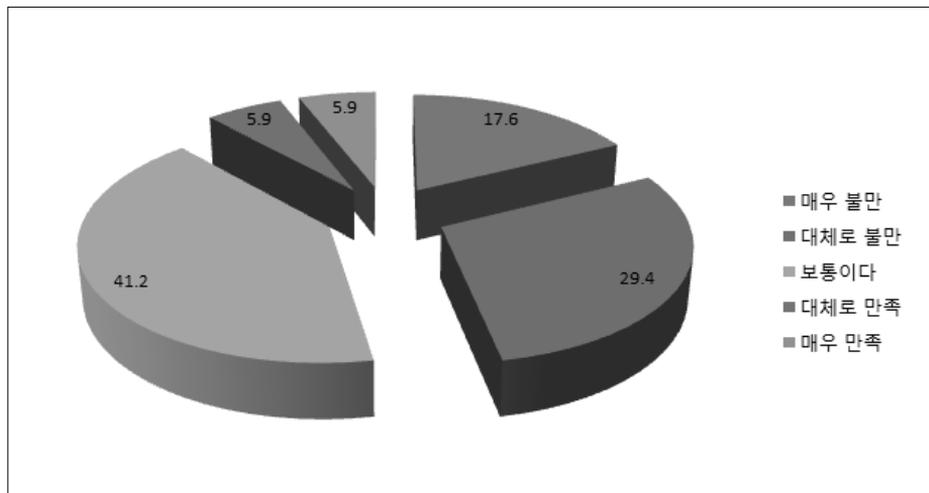


<그림 6> 컨설팅트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 업무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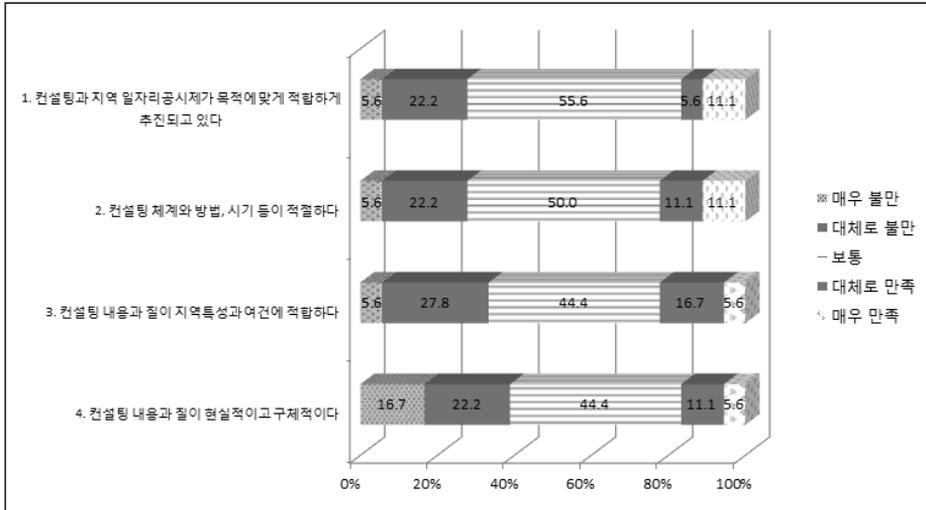
기타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평가부분에서 정성평가(질적 평가)가 중요하고 주민의 관심도 및 인지정도를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 및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컨설턴트를 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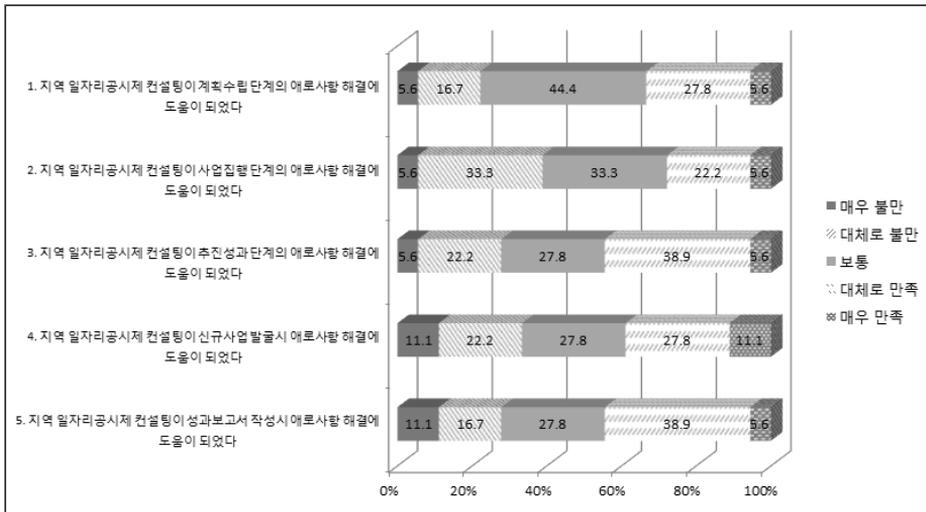
<그림 7> 자치단체 담당자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업무 파악 정도



<그림 8> 자치단체 담당자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업무의 강도



<그림 9> 자치단체 담당자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 목적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그림 10> 자치단체 담당자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컨설팅 사업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3. 정책과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에 참여한 컨설턴트와 지자체 담당자의 설문조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¹⁵⁾ 먼저 일자리 추진 체계 마련과 지자체 단체

15) 김대성(2011)의 연구 참조.

장의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추진 체계는 지자체와 고용 유관기관,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일자리 담당부서의 공시제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시는 일자리 전담부서의 신설로 업무 분장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만, 기초군을 중심으로 일자리 업무 전담부서의 미 신설로 자치단체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와 업무 과중으로 기피하는 업무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 및 연수기회와 승진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고 지역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의 여건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발굴 및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취업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노력은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및 리더십에 달려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의 노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지역환경(Milieu) = 지역 산업구조, 노동시장, 인력수급 정책 내실화
- ❖ 정책의지 및 수행능력(Determination & Competence) = 지자체장 열의, 공무원의 전문성, 책임부서의 권한, 컨설팅 지원 활성화
- ❖ 네트워킹(Networking) = 노동부(고용센터),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사업수행기관, 주민,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간 협력체제
- ❖ 제도기반(Institutional Support) = 관련 법규, 예산, 통합정보관리, 성과관리

자료 : 김대성(2011, 2013)의 연구를 재구성

<그림 11>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성공요인 분석

무엇보다도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는 부문별로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부문별로 창출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화산업 및 업종별, 구직 계층별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개발, 사회서비스, 문화와 관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층, 저소득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베이비부머, 소공상인에 적합한 업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남은 농·수·축산업, 식품산업, 특화자원 전략산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일자리 친화적인 6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의 취업서비스 지원과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는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으로 노사민정의 역할을 확립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전남고용포럼에 참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고용 유관기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고용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지난 3년간 전남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사업은 지역 일자리의 중요한 기체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제 지역 고용거버넌스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나아가 최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총괄적 운영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설치로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고용정책으로써 의미가 크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244개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등 일자리대책을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권역 내·외의 사례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의지와 지원도 최근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전남의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담당 공무원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지자체 담당자와 컨설턴트는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에 대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업무의 강도,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개선방향으로는 담당자의 근무연속성 확보, 사업집행단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컨설팅 실시, 평가부분에서의 정성평가가 중요, 주민의 관심도 및 인지도 향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향후 정책과제는 첫째, 일자리 추진 체계 마련과 지자체 단체장의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부문별로 지속가능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노사민정의 역할을 확립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첫째,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의 성과에 대해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성과에 대한 분석이 문헌적·경험적인 고찰뿐만 아니라, 산업연관분석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선5기와 함께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자리대책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경제, 환경, 산업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일자리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전남의 관련 담당자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하였지만, 향후에는 설문대상을 지역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 201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매뉴얼”.
- _____, 201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매뉴얼”.
- _____, 2013, “2013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 _____, 2013, “우리 지역 노동시장의 이해”.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 김대성, 2011, “전남 지역일자리 공시제 내실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제239호.
- _____, 2012, “전남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실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전남발전연구원, 『녹색전남』, 제75호, pp.185-213.
- _____, 2013, “전남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녹색전남』, 제79호, pp.86-106.
- 김진덕·남윤명, 2010, “지역 일자리공시제 도입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발전연

- 구원, 『충북 Focus』, 제15호.
- 남병탁, 2011, “경북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19, pp.263-285.
- _____, 201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22, pp.155-174.
- 모성은, 2011, “지역 일자리공시제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20, pp.245-271.
- 박우식 · 박상우, 2012, “지역고용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20(3), pp.155-172.
- 사구치 카즈로, 2011, 『지역 일자리 창출의 미래 전략』, 권영석 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DB센터
- 지역고용정책협의회, 2011, “2011년 1/4분기 회의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3,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사점”, 『경제주평』, 13(24), 통권 541호.

<Abstract>

The Performance and Policy Agenda in Disclosing System of
Local Job Creation Targets

– The Case of JeollaNam-do Region –

Ilta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ae-Seung Kim

Research Fellow, Jeonnam Research Institute

Jang-Seop, Byeon

Ph.D. Candida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s of the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s in Jeonnam region and thereb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e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s works as the cooperation projects of job creation between central and 244 local governments since July, 2012 and is expected to create new jobs in terms of a joint of case studies and network formations in inter-intra region.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performance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s using survey of consultan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leading to the several policy agendas including the arrangement of driving system, strengthening of evaluation system, sustainable good job creation, and building regional employment governance.

Key Words :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s, Job creation, Employment ratio, JeollaNam-do region

논문접수일 : 2013.12.11

심사완료일 : 2013.12.27

게재확정일 : 2013.12.27